

“임기 초반 폭염·산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 집중”

金총리, ‘첫 30일’ 업무계획 발표
공직사회시스템·정책 중점 점검
“초당적인 국민 에너지 모아야”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기 초반 폭염과 호우 등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한편 공직사회 시스템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첫 30일 업무 계획’

을 8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한 달의 업무계획을 열흘 단위로 나눠 작성하고 ‘10×3 플랜’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도 국력을 지켜 내자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향후 국정운영 방향으로 “안전·질서·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소

통·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초고속·초소통·초격차의 초선진 국정운영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권교체 이후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초당적으로 국민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경제위기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인 ‘K 토론 나라’를 통한 공개 토론을 격주단위로 운영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같이 총리실의 언론브리핑도 자주, 투명하게 열리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인의 점심 식사를 챙기기 위한 정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총리가 세종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세종 주간’을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與 “열악한 지방 재정 고려”
野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실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전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李 대통령 “여야는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동반자”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에 “힘 모을 것”
“방산수출 전략회의 정례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동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기로 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

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각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동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와 관련해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자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또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고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이끌 콘트롤타워 신설, 방산 및 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곧 방학철이니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與 “尹,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 포토라인에”

“무너진 상식·정의 바로 서는 날”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법과 역사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권의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이자 의혹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김건희”라며 “김건희 특검은 ‘빠박’ 증거가 넘쳐나는 김건희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속속 확정

전재수 14일·안규백 15일
이진숙 16일·윤호중 18일

국회가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교육위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가 총

장으로 재직했던 총남대의 연구윤리위원장이 채택됐다. 이 후보자의 ‘논문 쪼개기’ 의혹 등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확인을 위해서다.

농해수위와 국방위도 각각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4일·15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상국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 지부는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해왔다.

3선 국회의원인 전 후보자는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 현역위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할 책임자로 꼽힌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에서 15년간 활동하며 간사와 위원장을 모두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구성됐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